



Interview



감염병 없는 지구촌을 위한 발걸음

지영미 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의료미생물학 석사학위·바이러스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前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2020년부터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및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로 활동하는 등 20년 이상을 국내외 보건 분야에서 감염병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2021년 1월에 한국파스티르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여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Q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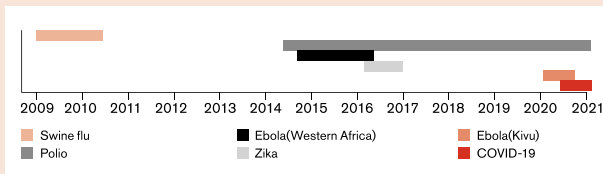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저희 법원 독자들은 소장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어떤 성격의 활동을 하나요?

A

“국제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 및 관리”

WHO 긴급위원회는 WHO의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는 WHO DG(Director-General, 사무총장)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즉, 에볼라,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나 폴리오(소아마비)와 같은 기존 감염병의 확산이 글로벌보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WHO가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WHO DG에게 제안하면 WHO DG가 이를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WHO 긴급위원회가 개최되며,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1차 회의 이후에 총 8차 회의까지 개최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WHO와 전 세계 국가에 제시해왔습니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분야 및 지역별로 전문가 안배하여 총 15~18명이 위원으로 참여”

공중보건, 역학, 감염, 실험실 진단, 위기소통 등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15~18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때 WHO의 6개 지역(아프리카, 미주, 동남아시아, 유럽, 동지중해, 서태평양)을 고려하



여 지역별로도 전문가를 안배하여 선정하는데요, 각 국가가 추천한 WHO 전문가와 WHO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에서 선정합니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A

“개별국 논의보다는 전 세계 차원의 논의”

코로나19 초기 중국에서 주로 유행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논의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사항(백신 공급, 의료체계, 국가 간 이동, 변이주 감시, 연구개발, 소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조정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WHO와 국가(Member States)에 제시합니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이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

긴급위원회의 운영은 WHO 국제보건규약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WHO 권고사항으로 각국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긴급위원회에서 전달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채택 여부는 각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WHO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Q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전망

국내에 소개되는 외신을 통해서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장님께서 국제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를 만나 각국의 사정과 대응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국가나 최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나 파키스탄도 걱정이 됩니다. 해외 각 지역/국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긴급위원회에서는 개별 국가보다는 전 세계 차원의 대응을 논의”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을 논의하고 다양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 위원회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개발 국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지역별 역량 강화 논의는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델타변이주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도는 사실 요즘은 유행이 많이 줄었고 아마도 자연감염으로 거의 집단면역이 형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체 조사 결과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합니다(미접종자 중 62%가 항체 양성).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영국을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낮고 영국은 높습니다. 두 국가 모두 최근 하루 3-5만 명 정도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사망자수는 인도네시아가 영국에 비해 20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백신접종률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 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A

“델타변이주 등 바이러스의 확산과 인류의 백신접종이 경쟁하는 상황”

현재의 상황은 델타변이주 등 바이러스의 확산과 인류의 백신접종이 경쟁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높은 국가에서는 방역수칙 완화로 다시 확산이 되더라도 증증진행률이나 사망률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백신 접종률이 국가별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연감염이 이미 집단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확산된 인도의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수많은 인명피해, 의료체계 붕괴가 있었죠. 따라서 백신접종률이 매우 낮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과 접종률을 함께 높이기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라는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구매-배분 메커니즘을 만들어 함께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한 선진국에서는 델타변이주 유행과 함께 부스터샷(booster shot, 추가접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1차 접종률이 10% 이하인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부스터샷 논의는 옳지 않다는 것이 WHO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백신 여유가 있는 국가들에서 백신을 기부한다고 하나 아주 소량이고 실제로는 부스터샷을 위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세계적인 대응으로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할까요?

A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과연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SARS-CoV-2는 ①사람 간 감염 이외에도 동물 감염원이 존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고 ②백신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 기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SARS-CoV-2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간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역이나 폴리오(Polio)와 같이 동물 감염원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우수한 백신이 개발되어 몇 십년간 퇴치/박멸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아직 퇴치/박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감염병의 완전한 퇴치는 어렵습니다.

Q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의 현재와 미래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의 현실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감

염병 연구의 현황 및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A

“감염병 연구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국제협력, 민관협력이 중요”

코로나19 진단분야에서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선제적인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기업들이 약진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 분야의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백신 분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치료제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등이 약진했습니다.

WHO 감염병 연구개발(R&D) 블루프린트, 글로피드알(GLOPID-r) 등 감염병 분야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에 일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관련정보 수집과 조정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이후 WHO는 감염병 연구개발(R&D) 블루프린트 팀을 신설하고 글로피드알(GLOPID-r),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 등과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주도해 오고 있으나 한국의 참여는 일부 개별 전문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국내와 국제에 경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뤄나가고 국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민관파트너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기록적인 백신 개발 속도와 접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민간의 의견수렴, 애로사항 청취의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ACTIV 모델¹⁾과 같이 민관협력이 동등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올 초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신 후 GC녹십자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시고 감염병 연구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에의

1) 국립보건원(NIH)과 NIH재단(FNIH)는 2020년 4월,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 촉진(ACTIV, 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Vaccines) 파트너십을 추진해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개발을 위해 유망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임상단계 진입을 촉진했다. (약업신문, “코로나19 대응 91.8억 달러 규모 R&D펀드 조성”, 2021.06.03.,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57876>)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향후 비전 혹은, 목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연구협력 및 인프라 확대 추진, 아태지역 감염병 연구 주도 목표”

녹십자 이외에도 국제백신연구소(VI),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 제넥신 등과도 올 상반기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연구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임상 동물 실험, 면역학적인 연구, 바이오인포매틱스(바이오정보분석) 강화와 감염병연구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스퇴르국제네트워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로 선출된 만큼 이 지역의 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Q

감염병 분야 법제에 대한 의견

감염병 연구분야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법·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평소 감염병 관련 혹은 다른 법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장기적인 감염병 연구를 위한 예산, 연구기관의 일원화 필요”

감염병 분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자의 동선 등 역학조사 자료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실적, 휴대폰 동선추적, CCTV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정교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관련한 내용은 법제에 포함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체험하듯이 감염병 연구는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R&D 분야도 비상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상시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편집 강서영 행정원(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